

정상회담에 나타난 협력의 재현: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회담 문서에
나타난 '협력' 개념 해석

도 종 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통합연구부)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상회담에 나타난 협력의 재현: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회담 문서에
나타난 '협력' 개념 해석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
2. 이 글의 전개 방향	3
II.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5
1. 기존 연구	5
2. 연구방법	9
1) 근거 이론	9
2) 부호화	12
III.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	14
1. 한중일3국 협력의 발전 및 구조	14
2.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의미	16
1) 개념화	16
2) 범주화	17
3) 구조화	21
4) 주제화	22
IV.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부록]	30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텍스트를 추출하고 ‘협력’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17건의 관련 문건을 310개로 부호화하여 개념화시켰으며 이를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3축으로 구분하여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어휘 빈도수와 맥락을 고려한 주제화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3국 정상은 협력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3국의 주변지역에 대해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협력의 영역이 갈수록 공공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홍안보 이슈는 별개의 어휘-자연재해, 에너지 등-으로 재가공되었고, 전통안보와 연관된 어휘들-군축, 핵무기, 무기-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한반도 안정이나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안보 및 북한 문제가 3국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다룰 만큼 접근이 쉬운 주제는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가 비록 문서에만 제한을 둔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언어 자료 중심으로 3국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회담이 지향하는 협력의 재현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협력의 지향점과 한계를 3국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건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후속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어: 3국 정상회담, 협력, 텍스트, 근거이론, 질적연구

I. 들어가는 말

1.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텍스트를 추출하고 ‘협력(cooperation)’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상회담은 관련 참여국들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회담이 종료될 때 마다 대개 합의문(statement) 혹은 공동 선언(joint declaration) 등의 형식을 띤 결과물을 발표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회담 참석자들이 가진 공동의 관심사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방향으로 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세계적 차원의 도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신중 관심사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주변국들과 양자적, 다자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질서와 범지구적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구상하고 실천해 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일정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 첫 시작은 바로 “공동 과제 000를 함께 해결해 보자”는 공동결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공동결정을 협력의 틀로 바라보게 되며 이는 협력의 ‘재현(representation)’으로 귀결되어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¹ 그렇다면 이때 ‘협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어떤 것은 협력하고 어떤 것은 협력하지 못할까? 협력으로 재현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까지일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그들 간의 3국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은 무엇으로 재현되는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은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나타난 텍스트를 탐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우선, 한중일은 오랜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형성해온 주요 행위자대입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은 오랫동안 양자, 다자 관계를 통해 국제관계

¹ 재현은 현전(re-present)케 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글에서 언급되는 재현은 인간의식이 어떤 정립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재현으로 추구하는 미메시스(mimesis, 모방)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간’의 재현은 시계, 약속, 세월, 노인, 질병 등이며 ‘민주주의의’ 재현은 의회, 인권, 평등, 자유 등이라고 가정한다.

및 외교적 현안을 논의하곤 했으나 3국만이 만나 주도하는 소(小)다자 협력을 위한 제도는 의외로 드물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이후 본격화된 3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양자주의(bilateral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틈새인 소다자주의의 한 가지 모델로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식민지 경험의 잔재인 역사적 과제를, 중국과는 해양안보 및 고대사(古代史) 속에 등장하는 민족의 영역 논란 등 각 행위자와 풀어야 할 지속적인 현안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질서 형성의 주도권을 놓고 과거부터 정치적 긴장관계를 줄곧 놓지 않고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 민족, 지역을 넘어 전통적인 맥락의 정치, 경제 이슈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초국경적인(transnational border) 도전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때로는 긴장관계를, 때로는 협력이 필연적인 애증의 3국 관계를 주어진 자료(data)를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론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3국 간 외교적 거버넌스의 내실을 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외교의 최종 마무리는 결국 각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한중일 정상들은 UN, ASEM, APEC, G20 등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만나 국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오로지 3국 정상만이 만나서 그들만이 다룰 수 있는 제한된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나 외교활동을 벌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대로 애증의 관계 속에서 한중일이 정상차원의 대면 접촉으로 외교현안을 해결할 만큼 쉬운 과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각국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외교적 요구는 포괄적이라기보다는 핵심 이익 혹은 국민정서에 민감한 것들이다. 이는 정치적, 역사적 이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3국정상의 만남은 의제 설정부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3국’을 아우르는 지정학적인 의미의 ‘동북아시아’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7년에 방콕에서 발족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후 아세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실천 행위와 누적된 경험이 언어적 지시체로서의 ‘동남아시아’를 개념화하였다. 이제는 ‘아세안’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체가 규범적으로 확립되었으며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간주관적으로 자리 잡았다. 아직은 느슨하기는 하지만,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개발협력, 제도적 협력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모호하다. 비록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라고 스스로 인식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공감각(共感覺)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접경한 국가로서 우리에게 동북아의 주요행위자이지만,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 구성을 지닌 탈 지역국가(trans-regional country)이다. 인도, 베트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라기보다는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유력한 행위자, 혹은 극동의 주요 경쟁자거나 협력자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을 보건데 일본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체성 보다는 대양을 끼고 있는 태평양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3국이 반드시 하나의 범주로 묶여야 할 동인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최고 외교 단계인 정상외교로까지 발전할 뚜렷한 계기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동북아시아는 오히려 한국이 주도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광대한 대지위에서 타국과 국경선을 길게 아우르지도 않고 있고, 민족적으로 다양하지도 않다. 또한 일본처럼 대륙을 등진 채 거대 해양을 품고 있지도 않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는 오히려 한국이 타 지역과 집경을 이루는 두 국가의 중간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정체성을 주도하여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례화 되고 2011년에 삼국협력 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된 것은 동북아시아주의의 형성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향후 역할을 위해서라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중일 삼국 협력이 제도적으로 거듭나고 있고, 외교 관계가 보다 확대 및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담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남긴 자료로-문서(text)-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 3국 정상회담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들이 내놓은 성과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전단계로서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대적, 공간적 과제를 탐구함에 있어 그들이 내놓은 언어의 성찬은 매우 의미 깊다. 그들이 내놓은 합의 내용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당대의 문제를 드러내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내린 결정은 현실에서 주요한 실천과제로 재현되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글의 전개 방향

이 글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성과물 즉, 텍스트를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하

였다. 외교 텍스트는 대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합의문을 심도 있게 분석·해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3국 정상회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는 그것이 일종의 외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다소 낮은 기대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그것의 실천적 유효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엘리트들이 가진 당위적 의식, 지향성, 사태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효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후 최근까지 도출된 결정문들을 주요자료로 삼아 그들의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연결해 주는 관념을 ‘협력(cooperation)’이라고 보았다. 후술하겠지만, ‘협력’에 대한 시각차는 국제정치 연구에서 현실주의(Realism)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구분하는 주요 개념으로 정책입안자, 연구자, 활동가 모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다.

한편, 앞서 제기한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를 전제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3국 정상회담의 ‘협력’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수많은 국제정치학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혹은 정상회담)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있다하더라도 강대국을 중심으로 몇몇 시기에 한정된 편중된 과제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일의 소다자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되 아직은 느슨하지만, ‘3국정상회담’이라는 제도적 범주를 연구 범위로 한정한다. 또한 3국정상회담의 중심 어휘인 ‘협력’에 관하여 국제정치학적인 틀에서 간단히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협력’이라는 3국 정상들의 공감각적 개념을 다룰 것이므로 질적연구 방법 특히 근거이론에 의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트라우스와 글레이저(Strauss and Glaser, 1967)가 제시한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른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3국 정상회담이 내놓은 합의문, 성명서, 선언 등을 자료로 삼아 ‘컴퓨터 활용 질적연구 방법’, 즉 ‘CAQDAS(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CAQDAS는 기존의 질적연구를 양적연구에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연구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중립성 등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는 CAQDAS가 가진 흠결이라기보다는 질적연구 및 근거 이론이 가진 연구의 관심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특성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양적연구가 가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경우 비판은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적접근의 판단 근거인 효율성, 중립성, 엄밀성이 아닌, 적실성과 타당

성의 견지에서 볼 때 CAQDAS를 이용한 근거이론의 이용은 텍스트 해석에서 연구과제의 결론 도출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의미 부여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II.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1. 기존 연구

정상회담을 뜻하는 영어 ‘Summit’은 윈스턴 처칠(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이 냉전이 시작될 무렵인 1950년 2월, 에든버러에서 있었던 한 선거 연설에서 ‘정상에서 교섭하다(to parley at the summit)’라는 표현을 쓰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처칠이 사용했던 ‘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의 만남을 추진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영국의 신문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² 정상회담은 ‘인적외교(personal diplomacy)’의 한 형태로서 회담에 참여하는 관련국들의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상외교는 대개 대사급이나 각료급 수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외교 문제를 다루되, 실무급에서 사실상 회담 조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후 정부의 수반들이 만나 최종 결론에 이른다.³ 17세기 이후 상주대표부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 간의 협상은 대사 혹은 공사급의 외교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정상회담(혹은 정상외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유럽 열강의 수반들이 모인 1815년의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를 시작으로 1919년의 파리 평화 회담(Paris Peace Conference)까지 19세기에는 다양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학술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회담의 결과

² David Reynolds, *Summits*, Philadelphia: Basic Books, 2007, p.1.

³ Graham Evans and Jeffrey Newham, ‘Summit Diplomacy’, In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enguin Books, 1998.

나 외교적 성과가 아닌 정상회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제한적으로 심화된 연구 성과가 출간되고 있다. 주로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 간 세계 질서 형성과 갈등 해소 그리고 위기 탈출의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조명된바 있다. 러셀 부히트(Russell D. Buhite)는 나치 독일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과 그 뒤처리에 관해 논의한 얄타 회담을 조명한바 있다. 그는 먼저 회담에 참여한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들의 시각을 정리한 후 전후(戰後) 처리에서 민감한 지역이었던 독일, 폴란드, 극동, 이란, 팔레스타인 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때 까지만 해도 미국은 얄타에서 공식적으로 스탈린과 유연한 관계를 기대하고 있었고 소련 역시 미국과의 경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고립된 소련 체제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기회를 엿보았다고 서술하였다. 하나 독특한 것은 여기서 각 정상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서유럽에 대해 이념적 시각에서 차이를 드러내 보이기는 하였으나 향후 출범하게 될 UN 등 국제기구가 이들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⁴ 이처럼 정상회담이 ‘국제협상(International Negotiations)’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회담의 당사자에 초점을 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제협상이 구조와 과정이 전략, 행위자, 결과를 통해 조명된다면,⁵ 정상회담은 오히려 참여하는 정부 수반의 인간적인 면과 스토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는 최종판단이 어려운 관료제적인 정책 결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상들의 인간적인 면 혹은 내면성이 부각된다. 부히트의 작업은 각국 정상들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환경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등이 회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놀즈(David Reynolds)는 20세기 냉전기의 중요한 6차례 정상회담으로 1938년 뮌헨, 1945년 얄타, 1961년 비인, 1972년 모스크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1985년 제네바를 꼽고 회담의 경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의 관심은 냉전의 심화와 긴장 해소가 정상회담을 통해 어떻게 그 차이가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강대국의 국가수반이 어떻게 접촉하고 협상하였는지를 서술하면서 국제 질서 형성의 새로운 각 단계에서 정상회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그는 사건 중심의 서술이 아닌 외교 기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보다 돋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부가 내놓은 기록들은 역사적 현실을 정확히 담고 있지 않으므

⁴ Russell D. Buhite, *Decisions at Yalta*, Lanham: SR Books, 1986.

⁵ Victor A. Kremenjuk, *International Negotiation-Analysis, Approaches, Issu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로, 문서의 행간을 읽고 회담에 참여했던 이들의 일기, 심지어 비망록과 공식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⁶ 말하자면 정상회담 시의 의전(儀典), 각종 언론보도, 외교적 실천 등 2차적인 재현보다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문서 그 자체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이다.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외교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서들도 출간된 바 있다. 예컨대 앤드류 모라비치(Andrew Moravcsik)는 1957년의 로마 조약부터 1991년의 마스트리트 조약 협상까지 40여 년간의 유럽통합 노력을 다루면서 유럽 각국이 임한 협상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였다. 그는 유럽통합이 참여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았다. 이른바 ‘국가 간 주의(inter-governmentalism)’로 불리는 성과를 내놓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인격적, 미시적 접근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회원) 국가의 선택이 보다 거시적 전략으로써 외교 협상의 숨은 기획으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⁷

한편, 국내의 정상회담 연구는 대부분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많은 정상회담이 언론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등 평화 담론이 학계에서 논의되었고 일시적으로나마 정상회담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⁸ 물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다룬 경우도 있다.⁹ 주된 연구의 방향은 각 회담이 내놓은 회담 내용과 결말을 분석하여 이들이 맺고 있는 각각의 연관 고리를 무엇으로 수렴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방향은 정상회담 연구의 한 가지 목적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 저변의 확대와 심화에서 양적으로나 실적으로 많은 성과가 더욱 더 축적되어야 한다.

⁶ Reynolds(2007: 9-10)

⁷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8.

⁸ 관련 논문으로는, 정천구,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전략』 제7권 3호, pp.7-48, 2007; 윤황,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통일전략』 제7권 3호, 2007, pp.293-348; 김수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의 조건”,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2007, pp.113-147; 장의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의 구상: 동북아 역내 이해구조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p.47-73.

⁹ 예컨대, 홍용표, “분단과 한국의 외교: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권 1집, pp.165-201; 이성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 2016, pp.59-102.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된 사건 위주의 연구, 역사성 혹은 제도 구축을 중심에 둔 연구, 남북관계에 매몰된 연구를 극복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인물 대(對) 인물의 만남이며 또한 국가대 국가의 외교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역사적 평가가 아닌 외교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접근법을 지양하고 언어학적,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정상회담이라는 사건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 도출된 문건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교 문건을 사건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로—특히 국제법적 시각에서—바라보았다. 따라서 문건, 특히 텍스트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해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여기서는 증거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사건 그 자체로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핵심어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텍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교문서는 문학작품이나 성서(聖書)처럼 문학적 상상력이나 신학적 믿음으로 오로지 상징과 은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외교문서는 그것이 성립된 외교관계가 지향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가 명료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3국 정상회담의 외교문서에 나타난 ‘협력(cooperation)’을 핵심어로 간주하고 접근한다. 국제정치에서 ‘협력’은 무정부, 위계, 구조, 자구(自救) 만큼이나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더 나아가 탈냉전 이후 국가 간 의제 설정 어젠다에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로버트 코헤인(Robert O. Keohane)에 따르면, ‘협력’은 ‘불화 또는 다툼(discord)’의 대립어이다. 그리고 협력은 또한 조화(harmony)와도 구분되는 데 조화는 타자가 원하는 바에 나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이지만 협력은 그래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협력은 서로 간의 이익이 공유되지 않는 상태 즉, 불화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불화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동의 이익을 좇아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협력과는 성격이 다른 조화일 뿐인 것이다.¹⁰ 그래서 불화에 빠진 서로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은 외교의 핵심이 된다. 3국 정상회담은 회담의 정례화 취지에서도 보듯이 3국의 협력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들 간의 협력은 과연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무엇으로 개념화되고,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 실천과제로 거듭나는지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교적 실천의 전제로서 동북아시아 3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협력’이 정상회담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¹⁰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Cooperation: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p.12.

토론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¹¹

1) 근거 이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질적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문 분야는 교육학,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다. 대개의 연구가 그렇듯이 질적연구의 성과도 이론 탐구 분야와 경험적 사례 분석으로 나뉘는데 이론 연구로는 내러티브 접근, 현상학적 접근, 근거 이론적 접근, 문화 기술지 접근 등으로 구분되고 사례 분석은 각 접근법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가 생산되고 있다.¹² 질적연구 역시 연구 주제, 범위, 자료 취합 등에서 엄밀성이 요구되지만 양적연구와 크게 구분되는 것은 철학적 기반이 연구 해석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적연구는 철학적 논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적연구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즉, 글쓰기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구자와 대상간의 분리를 전제하지 않는 질적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의 지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적 세계관과 이를 수집된 정보에 투영하여 어떻게 제시할지 혹은 설득할 것인가가 질적연구의 주요 과제가 된다.¹³

¹¹ 본 절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는 도중윤, “동반자관계 외교연구”, JPI 연구보고서, 제주평화연구원, 2016의 ‘연구방법’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¹² 질적연구에 관한 보다 개괄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존 크레스웰(John Creswell) (저), 조홍식 외(역),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0; 노먼 덴진, 이본나 링컨(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저), 최옥 외(역), 『질적 연구 핸드북』, SAGE 아카데미프레스, 2014. 국내연구자들의 경우 교육학, 사회학, 간호학 등의 사례연구에서 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론적인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천&주재홍,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열린교육연구』 vol.18, no.1, 2010, pp.155-183; 김영천, 이동성, “질적 연구에서의 대안적 글쓰기 이론화 탐색”, 『열린교육연구』, vol.21, no.1, 2013, pp.79-76; 김영천, 주재홍,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그 방법적 이슈들”, 『교육인류학연구』, vol.15, no.3, 2012, pp.29-61; 김영천, 주재홍,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그 방법적 이슈들”, 『교육인류학연구』, vol.15, no.3, 2012, pp.29-61; 정상원&김영천, “질적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20, no.3, 2014, pp.5-42.

¹³ 국제정치학 연구자의 글쓰기와 관련된 논의는 도중윤,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vol.57, no.2, 2017, pp.51-96.

질적연구는 면담과 체험이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 반면 그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기록물(documents), 동영상, 음성(녹취)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남겨진 자료들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경우 사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¹⁴ 문서는 공식 기록은 물론, 연설문, 회고록, 서간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던 것은 질적연구가 주로 이용된 간호학, 교육학 등에서 문서에 대한 의존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한 활동은 면담이나 체험을 통해 직접 접하기 보다는 문서를 통한 기록으로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구체적으로 외교사,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에서는 면담이나 체험보다는 기록으로 남긴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질적연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면담이나 참여 관찰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파악하고 기록에 반영된 사회적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⁵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¹⁶ 근거이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記述)보다는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황(자료)을 개념화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묶음으로 범주한 후, 범주들 간의 구조를 엮어 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최종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¹⁷ 질적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거이론은 개념화부터 주제 도출까지 이러한 절차를 비교적 명확하게 따른다.¹⁸ 우선 첫 단계에서는 발생한 사건

¹⁴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는 물론이고, 2010년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중동아프리카의 여러 민주화 혁명에서 SNS는 매우 중요한 활동기제였다. 이들 역시 글과 영상, 음성 등으로 기록된 자료이므로 이들을 학술적 자료로 어떻게 끌어 올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¹⁵ 김영천&정상원,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vol.21 no.6, 2015, pp.253-285.

¹⁶ 근거이론은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Barney G. Glaser & Anselm L. Strauss)가 1967년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을 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 글레이저(Glaser, 1992), 차마즈(Charmaz, 2006, 2011) 등이 발전시킨 바 있다.

¹⁷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코딩을 통해 구축된 연구 주제의 최종결과물을 뜻하는데, 이는 소수의 전제가 만든 원리나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명”을 뜻한다. 박종원, 『질적 자료분석: Nvivo 10응용』, 부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4, p.135.

¹⁸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질적자료분석』, 파주시: 아카데미프레스, 2016, p.56.

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서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면담, 조사, 문서 검토 등을 거치며 이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부호화(coding) 작업이다. 이는 언어에 기반한 정보,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핵심을 포착하여 짧은 문장 혹은 단어로 축약하는 작업이다.¹⁹ 세 번째 단계는 1차 코딩된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범주별로 묶는 작업이다. 코딩은 끊임없이 반복 되는데, 자료가 많을수록 여러 차례 반복되면 중간에 재수정되기도 한다. 코딩된 자료는 사람이 직접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Nvivo의 경우 모아진 자료들을 노드(node)에 저장하며, 코딩을 통해 개념화된 지시체(reference)들은 다시 연구자의 개입에 의하여 범주화된다.²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화된 노드들 간의 관계를 주제화하여 묶는 작업이 진행된다. 과거에는 방대한 자료를 읽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손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메모나 연구노트 등을 활용하여 체계있게 정리한다고 하여도 일관성 있게 모든 자료를 정리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어 편의성과 신속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범주화된 방대한 자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진술문의 군집 분포, 빈도수, 중심어를 매개로한 관계 설정 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작업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코딩작업과 범주화 작업 시에 연구자가 얼마나 통찰력 있게 작업을 해주는가에 따라 관계설정의 충실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작업이 끝난 결과물에 대해 연구자가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근거이론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 수집과 그 자료에 대한 분석 또는 해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반복적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로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와 자신의 분석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고민과 성찰을 유도한다.²¹

¹⁹ Johnny Saldanña,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Singapore, Washington DC: SAGE, 2009, p.3.

²⁰ 질적연구를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이하 CAQDAS)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종윤(2016)의 ‘연구방법’ 참조.

²¹ Kathy Charmaz, “Grounded Theory Methods in Social Justice Research”,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4th), London: SAGE, 2011, pp.359-380.

근거이론을 방법론으로 이용하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정리와 결과도출 작업에 이용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연구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설정하고, 방법론을 선택하며, 연구 성과를 글쓰기로 서술하는 등의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철학적 지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이러한 것까지 의존할 수는 없다. 다만, 질적 연구가 줄곧 지적 받아 왔던 단점들, 예컨대 연구과정의 일관성, 자료의 저장, 자료의 통일적인 연관 관계 비교 분석의 정확성, 결과물의 시각적 편의성 등에서 상당한 유용성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2) 부호화(Coding)

“부호란 일반적으로 언어를 바탕으로 하거나 시각자료의 일부에 대해 부가적이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본질을 포착하며, 무엇인가 연상을 하게 하는 속성을 상징적으로 할당한 단어나 구”를 말한다.²²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수치적 자료가 아닌 언어, 이미지, 음성 등으로 표상된 자료이다. 이를 부호화하는 것은 근거이론에서 핵심적인 작업이다. 부호화는 주어진 자료 전체의 본질을 포착하여 총체부호라고 불리는 개괄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lumping), 반대로 부호화된 자료를 더 상세하게 쪼갤 수도 있다(splitting). 전자가 하부 부호화를 2차, 3차로 만들어나가는데 반해 후자는 처음부터 자료에서 표현된 뉘앙스를 분석해나가는 방법이다. 총체부호화는 부호화에 대한 정리가 용이한데 반해 쪼개기는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²³ 또한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 하는 ‘개방 코딩’,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다시 조합하는 ‘축 코딩’, 그리고 범주 중 핵심 범주를 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이야기 윤곽을 형성하는 ‘선택 코딩’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²⁴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가능한 부호화는 어떤 기준(범주)을 따라 분류할 것인가? 글레이저는 자료를 통해 얻은 경험적 패턴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6C(영어의 첫머리 글자로 알파벳 C가 사용)와 18개의 코드를 제안한바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²² ohnny Saldaña(2009), p.3.

²³ Johnny Saldaña(2009), pp.19-20.

²⁴ 오영범 외(2016), p.41.

다.²⁵

〈표 1〉 글레이저의 코드

구분	코드의 범주
6C	원인(Causes), 맥락(Contexts), 부수적 사건(Contingencies), 결과(Consequences), 공변이(Covariances), 조건(Conditions)
18개 코드	과정(process), 정도(degree), 차원(dimension), 유형(type), 전략(strategy), 상호작용(interaction), 정체성과 자아(identity-self), 구분점(cutting point), 수단과 목적(means-goal), 문화(cultural), 총의(consensus), 주류(mainline), 이론(theoretical), 배열 또는 정교화(ordering or elaboration), 단위(unit), 읽기(reading), 모델(model)

그러나 이러한 부호화 지표가 모든 연구에 반드시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같은 문장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부호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컨대 망치는 맥락에 따라서 건축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흥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1차 부호화 된 개념들이 범주화에 들어설 때는 개방코드에 따라 그때그때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된 코드에 자료를 적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부호화 시켰느냐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글레이저의 코드는 부호화를 일반화 시켰다기보다 일종의 범주적 예시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더욱 더 창의적인 다른 개념을 부호화시켜 새로운 코드 범주를 만들 수도 있다.

²⁵ Barney G. Glaser(저), 김인숙·장혜경(역),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글레이저의 방법』, 서울: 학지사 p.50.

III.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서는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문서이다. 문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3국 협력에 관한 사전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어서 문서의 해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1. 한중일 3국 협력의 발전 및 구조

1999년 11월, 아세안+3(ASEAN+3)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랜 동안의 공백기를 딛고 2008년 12월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이후 2009년(중국 북경), 2010년(한국 제주), 2011년(일본 동경), 2012년(중국 북경), 2015년(한국 서울) 등 총 6차에 걸쳐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런 가운데 3국 협력 비전 채택(2010),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개소(2011), 한일중 투자보장협정 서명 및 3국 간 FTA 개시 합의(2012)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3국 협의체는 정상회담 외에도 21개의 장관급 회의, 70개 이상의 실무자급 회의가 열렸고 100개 이상의 협력사업 및 민간부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천 활동은 다시 트랙 I, II로 나뉘어 구분할 수 있다.

〈표 2〉 협의체의 구조

	구 분	
	정부(트랙 I)	민간 (트랙 II)
수 준	정상회의	싱크탱크
	장관급 회의	국제기구
	고위급회의	비정부기구
	국장급회의	대학
	심의관급 회의	기타

출처: 3국협력사무국(Tri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협의체는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정치안보, 경제, 지속가능성장, 사회·문화 등 4개의 주제별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소주제의 구체적 협의체 구성 및 실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3〉 주제별 분류

		분류
구분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치·안보	정치, 안보, 재난 예방 및 관리
		역내 이슈, 국제이슈
	경제	무역 및 투자, 교통 및 물류, 세관
		특허, 재무,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기술산업, 에너지, 표준협력, 소비자
	지속가능성장	보건 및 복지, 농업, 환경보호, 수자원, 산림
사회·문화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교류, 체육, 인사행정, 연구기관 교류, 언론	

출처: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정상회의의 경우 세 가지 협의체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정상회의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99년 11월 처음 개최된 아세안+3 이래로 3국 정상이 조찬 모임 형식으로 격의 없이 별도로 만나는 회의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는 ‘3국 비즈니스 정상회의(Trilateral Business Summit)’가 개최되고 있는데, 3국의 주요 재계 협회의 인사들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기 위하여 모인다.²⁶ 이외에도 정치 분야에서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007년에 창설되어 3국 간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에 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2011년에는 안보 분야에서 ‘한중일 대테러협의회’가, 2014년에는 ‘한중일 사이버 정책협의회’가 창설되어 재래식 안보 뿐 아니라 신형안보에 대한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초석을 놓았다. 이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통상장관회의(2002),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건장관회의(2007), 사회·문화 분야에서 문화장관회의(2007)

²⁶ 중국은 중국국제무역진흥위원회(China Council of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일본은 경단련(Japan Business Federation), 한국은 전경련(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관련인사들이 참여한다.

등이 각료급 수준에서 창설되었고 분야별, 수준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3국정상회담은 어느덧 정례적인 만남으로 궤도에 올랐을 뿐 아니라 관심영역과 활동 분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 상황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2.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의미

1) 개념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상회담 문건은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3국협력 도서관(Trilateral Cooperation Library)’→‘3국 협력 협의체(Tr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문서(Documents)’의 디렉토리를 거쳐 ‘3국 협력에 관한 기본문서(Basic Documents on Trilateral Cooperation)’를 사용하였다. 게시된 문건은 총 21건이나 ‘3국협력 사무국 설치에 관한 메모(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처럼 실무적 차원의 문건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용된 자료(source)를 기간으로 분류하면 2003년 10월 07일~2012년 5월 13일까지이며, 성격별로 분류하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8건,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2건, 협력문(Cooperation) 3건, 3국 공동발표문(Trilateral Joint Announcement) 1건, 공동기자회견 성명(Joint Press Statement), 1건, 정상 선언(Summit Declaration)1건, 협력 비전(Cooperation Vision) 1건 등 총 17건이다.

추출된 문건을 토대로 한중일 3국 협력회담에서 논의된 관계에 관해 문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근거이론이 주된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첫 시작은 각 문건의 지시체(reference)에 드러난 의미를 개념화하는 코딩작업이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협력(cooperation)’이 어떻게 의미화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오픈코딩이 아닌 제한코딩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협력’이 각 문건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건마다 ‘협력’를 검색하여 이 단어와 관련된 앞뒤 문장을 진술문의 지시체로 설정한 후 이를 부호화(coding)하였다. 또한 1차 부호화에서는 총체부호화(lumping)가 아닌 쪼개기(splitting)를 시도하여 관련 문구마다 비교적 세밀하게 부호화를 시도하였다.

〈표 4〉 3국정상회담 문건의 노드와 레퍼런스

3국정상회담 문건		
Name	Nodes	References
2003,10,07_Joint Declarati	56	71
2007,01,14_Joint Press Sta	16	17
2008,12,13_Joint Statemen	8	8
2008,12,13_Joint Statemen	5	5
2008,12,13_Trilateral Joint	5	5
2009,10,10_Joint Statemen	10	11
2009,10,10_Joint Statemen	20	22
2010,05,29_Joint Statemen	9	9
2010,05,29_Joint Statemen	13	13
2010,05,29_Trilateral Coop	50	55
2011,05,22_Cooperation o	8	10
2011,05,22_Cooperation o	5	5
2011,05,22_Cooperation to	7	7
2011,05,22_Summit Declar	27	29
2012,05,13_Joint Declarati	53	58
2012,05,13_Joint Statemen	10	11
2012,05,13_Joint Statemen	8	10

〈표 4〉가 보여주듯이 17건의 문건에 ‘협력(cooperation)’을 검색하여 해당 단어가 들어간 진술문을 지시체로 하여 노드(node)를 만들었다.²⁷ 예컨대 2003년 10월 7일의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의 경우 71개의 진술문에 ‘협력’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국문으로 부호화하여 56개의 노드를 만들었다. 진술문의 지시체가 노드보다 적은 이유는 의미상 중복되는 경우 같은 부호화를 했기 때문이다. 지시체는 총 346개가 도출되었고 노드는 총 310개가 만들어졌다. 부호화 된 노드는 310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 범주화²⁸

1차로 부호화된 진술문은 다시 재정리하여 2차 부호화를 시도하였다. 2차 부호화는 1차

²⁷ 문건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검색 또한 cooperation으로 하였다.

²⁸ 부록의 2. 범주화 참조.

부호화된 진술문 중에 내용상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묶고 성격상 다른 것은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2차 부호화는 쪼개기에 의해 1차 개념화된 자료들을 공통적인 속성으로 묶고자 하였는데 글레이저가 제시한 6C와 18개의 코드를 참고하였다.

〈표 5〉 글레이저의 코드와 범주화

글레이저의 부호와 분류	3개의 축	범주
정체성과 자아(identity-self) 단위(unit)	현실인식	가치 제도
원인(causes), 수단과 목적(means-goal), 전략(strategy), 상호작용(interaction), 배열 또는 정교화(ordering or elaboration)	도전과제	과제
조건(conditions), 유형(type)		영역
문화(cultural)	미래방향	태도
결과(consequences), 총의(consensus), 정도(degree)		평가

범주화는 크게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3가지 축을 ‘협력’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첫째, 6개로 범주화한 기준은 ‘협력’이 기본적으로 3국정상회담의 합의된 정책의 지도방향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둘째, 글레이저가 제시한 6C와 18개의 코드를 범주화 작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속성의 유사성을 근거로 도표와 같이 재분류하여 묶었고 이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개념범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이번 연구에서 ‘정체성과 자아’는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가치는 사회에 대한 주체의 자기인생 투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가진 의지, 신념 등이며 이를 이번 연구에서는 ‘가치’라는 범주화로 표현하였다. 말하자면 협력하기로 한 3국 정상들 간의 공통된 이념적 배경, 정책 목표, 공유하는 기본 태도와 관념 등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재현은 ‘가치’라는 범주를 형성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본 연구에서 범주화로 시도된 ‘제도’는 ‘협력(cooperation)’이 포함된 국제기구 혹은 발간 문서 등을 말한다. 예컨대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에(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경우 본 연구에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cooperation’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내용을 버리지 않고 명칭

을 그대로 1차 부호화 했는데 범주화 단계에서는 ‘제도’로 묶었다. 그렇다면 3국 정상회담은 협력을 어떤 재현으로 지시하고 있는가? 이를 세분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국 정상회담은 협력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정상들은 ‘건전한’, ‘지역’, ‘상호이익’, ‘밝은 미래’, ‘포괄적’, ‘실천적이고 실질적’, ‘미래’, ‘생기와 동학(vitality and dynamism)’, ‘부정적인 충격의 극복’, ‘전략적 관점’, ‘모두가 승리하는’ 등의 어휘와 함께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재정리하자면 3국 정상들은 협력에 대하여 ‘건전한, 밝은 미래, 생기와 동학, 포괄적’ 등과 같은 규범적 가치 부여와 ‘전략적’, ‘상호이익’, ‘모두가 승리’ 등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 가치부여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규범적 가치 부여 보다는 실질적인 가치 부여에 대한 표현이 보다 풍성하고 많이 보였는데, 이는 3국 정상들이 일반적, 보편적 차원에서 규범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내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의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3국 정상들은 실질적인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어떤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는 3국정상회담의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상회담의 거버넌스 및 다른 지역/기관들과의 관계 모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연관되는 어휘는 ‘삼국협력의 시작, 보장, 증진, 강화’ 등의 표현과 ‘협력의 10가지 순위’, ‘더 나은 미래’, ‘확장된 협력’,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 등이다. 거버넌스 관련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3국 간 협력의 거버넌스로서, ‘10가지 유선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 ‘3국협력 사무국의 설치’, ‘협력 매커니즘의 구축’,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한 협력’,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의 설치’, ‘문화부장관급의 협력’, ‘지방정부간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지역/기구와의 협력으로 ‘아세안 및 APEC, EAS(East Asia Summit), AFR,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G20’ 등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3국 정상들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그들 간 협력의 내실화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웃과의 선린 관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협력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6가지 범주화 중 지시체가 가장 많은 범주가 바로 ‘영역’이다. 이때 영역은 3국 협력이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의미하는데 경제 협력 및 무역은 물론이고, 국제금융, 과학기술, 농업, 보건, 어업, 원자력 안전, 정보통신, 대학 및 스포츠 교류, 에너지, 운송, 식량안보, 사회문화 등 포괄적 의미의 협력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위험물 폐기, 문화콘텐츠, 미세먼지, 사막화 조

절, 지속가능한 숲 관리, 파오기 등의 텃새류와 철새의 보존, 유전자자원 공유, 전자제품 폐기, 해적 및 테러리즘 등 매우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것은 경제와 무역과 더불어 농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자연 재해 등 과도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3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을 산업의 기본으로 취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업 협력 요구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타당한 논의로 보인다. 최근에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농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 및 환경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정상회담의 성과물에서 드러나듯이 자연에 대한 관리와 협력은 실천적 관점에서나 윤리적 관점 모두 정상들의 공감대 형성을 쉽게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통안보영역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는 1차 부호화된 진술문에도 안보가 주요 개념으로 지시되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농업(혹은 환경)과는 달리 전통적 의미의 안보는 배타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언급조차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과제와 영역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3국 정상들이 미래 비전이나 실천 과업 혹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태도는 정체성과 자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점검한 정상들 간의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태도는 개인의 심리나 사적인 차원의 정신의학적 문제는 아니다. 3국 정상회담은 외교행위이며 이미 주어진 관계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회담의 문건은 자아성찰적인 내적 고백이 아니라 외교 행위에 따른 의식이며 대외관계에 대한 천명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정신의학적 의미에서의 태도가 아닌 세 나라가 역내 관계 혹은 주변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개발협력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존중’, ‘아세안의 선도적 역할을 지지’, ‘아세안의 역할을 존중’, ‘아시아의 추동력으로서의 아세안’, ‘UN 헌장뿐 아니라 다른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지’,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삼국협력’, ‘이웃국가들과의 협력’, ‘하부지역(sub-region) 단위의 협력을 지지’, ‘원자력 안전과 IAEA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지지’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제 3자에 대하여 호혜적, 선린적,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주변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UN 등 국제 규범이나 혹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동아시아의 주요행위자인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에 대한 지시체가 46회에 달한 반면,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시체는 단1회에 그쳤

다는 점이 증명한다.

다섯째, 3국 정상들은 3국의 관계가 과정적이며 항상 상호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시공간적 수준, 영역적 수준에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즉, 3국 정상회담이 ‘고위급 정상회담을 가져올 것’,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에 만족’, ‘삼국간의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 역할을 강조’, ‘3국 협력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탄력을 증가시키는 계기’, ‘3국 협력에 의해 늘어난 이익’, ‘3국 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와’, ‘한중일의 협력은 많은 기회를 줄 것’, ‘(사막화)와 관련된 이전의 협력에 대해 만족’ 등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온 과정을 표시하였다. 또한 ‘3국 협력의 진행과정을 검토’, ‘효율적인 모니터’ 등 3국 협력의 과제가 실천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혹은 검토 작업을 통한 개선점 강구 등을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관련된 것은 3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건에서 각종 선언문이나 국제기구에 표시된 고유명사 표기로 드러났기에 여기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선언문이나 국제기구 등이 다주 언급되었음은 전통과 기존의 규범을 존중하고 계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구조화²⁹

‘협력(cooperation)’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보았다. 이는 어휘의 의미 배열에 따라 관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품사에 따라 구분하자면 좌측은 주로 동사와 형용사 중심이고 우측은 명사 중심으로 모여져 있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좌측은 ‘효율적(effective)’, ‘가능한(possible)’, ‘조화된(concerted)’, ‘구체적인(concrete)’, ‘실질적인(substantial)’, ‘깊은(deepen)’, ‘과거의(past)’, ‘최근의(recent)’, ‘더 나은(better)’, ‘어려운(difficult)’, ‘건전한(sound)’, ‘추진하는(driving)’, ‘광범위한(extensive)’, ‘필요한(necessary)’ 등의 형용사와 ‘북돋우다(encourage)’, ‘필요하다(need)’, ‘증가시키다(enhance)’, ‘촉진하며(promoting)’, ‘다양화하다(diversity)’, ‘강화하다(strengthen)’, ‘지지하다(support)’, ‘구축하다(establish)’, ‘강조하다(emphasize)’, ‘결정하다(decide)’, ‘합의하다(agreed)’, ‘성취하다(achieve)’, ‘접근하다(approach)’ 등의 동사가 보였다. 우측의 경우, ‘과학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경제 및 무역(economic and trade)’, ‘사무국(secretaria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대화(dialogue)’, ‘회담(meeting)’,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²⁹ 부록 3 구조화 참조.

development)', '문화유산의 보호(cultural heritage protection)', '에너지(energy)',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교류(exchange)', '먼지와 모래폭풍(dust and sandstorm)', '스포츠(sports)', '조사(inspection)', '기술(technology)', '혁신(innovation)', '농업(agriculture)', '어업(fishery)', '녹색산업(green industries)', '관세(customs)', '정보(information)', '제도의 구축(institutional building)', '군축(disarmament)',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핵심지대(key areas)',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테러리즘(terrorism)', '틀(framework)', '아세안(ASEAN)' 등이 추출되었다.

협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과제와 영역이 담겨 있고 왼쪽은 가치, 태도, 평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역으로 과학, 기술, 에너지, 정보, 스포츠, 문화유산, 비전통 안보 등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협력의 강화, 지지, 구축, 강조, 결정 등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이 언급된 항목은 대체로 국가가 주도하되 실천의 몫은 민간의 협력과 교류에 의존하는 것들이다. 이는 이익이 배타적이지 않고 협력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큰 경우이며 또한 일반인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쉬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3국 정상들은 이러한 협력이 때로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실질적인',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는 가치 지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때 어려움이 강조된 것은 3국 간 이익의 충돌 때문이라기보다는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민이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주제화³⁰

위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어휘 빈도 크라우드로 표시하면 부록 4.1), 2)와 같다. 가운데 크게 보여지듯이 협력(cooperation)이 가장 많은 어휘 빈도수를 보인다. 전체 사용 어휘의 약 3.21%가 협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보고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3국을 뜻하는(three) 어휘 빈도수가 높았고, 국가(countries), 삼국(trilateral) 등 대화의 주제와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기능적 어휘를 제외하면 영역과 과제에 관한 빈도수가 높았다. 또한 가치를 뜻하는 어휘 빈도수도 높았다. 가치 부여가 높게 나타난 것은 회의에 대한 내부적 정당성의 확보는 물론 대외관계에서 일반성과 보편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development), 증진

³⁰ 부록 4 주제화 참조.

하다(promote), 사람(people), 공동의(joint), 경제의(economic), 만남(meeting), 강화하다(strengthen), 재난(disaster), 지속가능한(sustainable), 노력(efforts), 관리(management) 등의 어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한반도와 관련된 협력의지이다. 이는 남북한의 대결과 동북아시아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적어도 3국 정상회담에서는 ‘협력’과 관련하여 한반도가 연계된 주제는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security), 핵/원자력(nuclear), (한)반도(peninsula), 북한(North Korea) 등에 관한 어휘는 빈도수도 낮았고 구조화 시킬 만한 연관성 높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가 안보, 동북아시아의 규범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며 외교적 관계에 의한 배타성이 여전히 지배하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가진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대상인 동북아의 안보는 공공의 영역이 아닌 국가 간 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서에 드러난 내용만을 보았을 때, 한반도 문제가 전통안보에 관한 이슈는 3국 정상회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아주 작은 범위에서 논의 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혹은 대북 정책 문제가 아닌 핵/원자력 이슈는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3국은 2011년 5월 22일 별도의 문건(Cooperation on nuclear safety)을 만들 정도로 이를 중요하게 다룬바 있으나 이는 무기로서의 ‘핵’이 아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 재해의 원인으로서의 ‘원자력’ 안전을 다룬 것이었다.

3국 정상회담에서 정치 및 안보 이슈와 관련된 협력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이에 대한 재현 어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매우 어려운 판단을 요구한다. 3국 간 회담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주제는 어휘 분석의 한계상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 대화 주제 선정과 관련된 의도와 태도는 정치적 판단이나 실무적 접근에 따른 또 다른 연구 방법을 요구한다. 빈도수가 낮거나 혹은 문건에서 배제된 주제(혹은 어휘)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3국 정상회담을 토대로 최근 맺어진 외교문서를 토대로 ‘협력’이 어떻게 개념화되었고 무엇으로 재현되고자 하는지를 근거이론을 통해 통해서 살펴보았다. 정상회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종의 정치적 사건으로 한정하여 역사적 접근에 그치거나 외교적 실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제한적 역할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외 연구의 경우 냉전 시기 미국의 외교를, 국내 연구의 경우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적,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과 미국 중심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외교가 아닌 동아시아 3국의 정례 소다자회담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크게 논의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시도였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주어진 17건의 문건을 310개의 부호화를 통해 개념화시켰고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방향 등 3축을 제시한 후 글레이저의 분류법을 적용시켜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어휘 빈도수와 맥락을 고려한 주제화로 결론에 근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3국 정상은 협력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경제와 무역뿐 아니라 환경, 과학기술, 재난, 스포츠, 교육, 관광 등 소위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 거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매우 낙관적인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협력에 대한 강화, 지지, 증진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국을 벗어난 주위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3국의 비전을 공유하고자하는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협력의 영역이 갈수록 공공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자연재난과 같은 환경, 기후와 에너지, 숲 보호, 동식물 보호 등은 매우 자주 언급되며 이와 연관되는 단어인 지속가능한 개발도 중요한 실천 원칙으로 언급된다. 반대로 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적다. 이는 ‘안보(security)’라는 어휘의 빈도수 자체가 상대적

으로 적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반면 신흥안보 이슈는 별개의 어휘-자연재해, 에너지 등—으로 재가공 되었으나 전통안보와 연관된 어휘들—군축(disarmament), 핵무기(nuclear), 무기(weapon)—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와 연관지어 보자면 우리의 관심사인 한반도 안정이나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통안보가 정치적 문제이자 국가 간 관계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3국 간에 여전히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추정케 한다. 따라서 아직은 정상회담에서 다룰 만큼 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개념 수렴이 되어 있지 않고 접근이 쉬운 주제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철저하게 자료 중심의 연구였다. 물론, 자료 중심의 이러한 접근이 가진 한계점도 있다. 첫째, 이번 결과에서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협력의 국가별 차이점을 구분하여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상회담 문건에 국가별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수집된 문건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적용된 문건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의 시간 편차가 있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협력 개념의 변천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웠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회담의 문건 분량이 많아지고 포괄적 이슈에서 공익을 다루는 세부적 이슈로 보다 정밀해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부호화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보다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한정하고 바로 범주화에 도전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이다. 2차, 3차로 부호를 재정리하면서 타 연구자들과 타당성 논의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언어 자료 중심으로 정상회담이 지향하는 협력의 재현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문건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의 지향점과 한계를 3국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렴과 발산의 태도가 어디에서 분기(分岐)되고 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의 조건”,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2007, pp.113-147
- 김영천&정상원,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vol.21 no.6, 2015, pp.253-285.
- 김영천&주재홍,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열린교육연구』 vol.18 no.1, , 2010, pp.155-183.
- _____,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그 방법적 이슈들”, 『교육인류학연구』 vol.15 no.3, 2012, pp.29-61.
- 김영천&이동성, “질적 연구에서의 대안적 글쓰기 이론화 탐색”, 『열린교육연구』 vol.21 no.1, 2013, pp.79-76.
- 노먼 덴진, 이본나 링컨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저), 최욱 외(역), 『질적 연구 핸드북』, SAGE 아카데미프레스, 2014.
- 도종윤, “동반자관계 외교연구”, JPI 연구보고서, 제주평화연구원, 2016.
- _____,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vol.57 no.2, 정상원&김영천, 2014. “질적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20 no.3, 2017, pp.5-42, pp.51-96.
- 바니 글레이저(저), 김인숙·장혜경(역),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글레이저의 방법』, 서울: 학지사, 2014.
- 박종원, 『질적 자료분석: Nvivo 10응용』, 부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4.
-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질적자료분석』, 파주시: 아카데미프레스, 2016.
- 윤 황,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통일전략』 제7권 3호, 2007, pp.293-348.
- 이성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국제지역연구』 제 20권 4호, 2016, pp.59-102.
- 장의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의 구상: 동북아 역내 이해구조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p.47-73.
- 정천구,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전략』 제7권 3호, 2007, pp.7-48.1
- 존 크레스웰(John Creswell)(저), 조흥식 외(역),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0.

홍용표, “분단과 한국의 외교: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권 1집, 2010, pp.165-201.

Buhite, Russell D., 1986. *Decisions at Yalta, Lanham*: SR Books.

Charmaz, Kathy, 2011. “Grounded Theory Methods in Social Justice Research”,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London: SAGE, pp.359-380.

Evans, Graham and Jeffrey Newham, 1998. ‘Summit Diplomacy’, In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enguin Books.

Glaser, Barney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Sociology Pr.

_____. & Anselm L. Strauss, 2000.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1967 by Barney G. Glaser & Anselm L. Strauss Renewed 1995, 1999), New York: Routledge.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Cooperationan: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Kremenyuk, Victor A., 2002. *International Negotiation-Analysis, Approaches, Issu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 Press.

Raynolds, David, 2007. *Summits*, Philadelphia: Basic Books.

Saldañ Johnny,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Singapore, Washington DC: SAGE.

Strauss, Anselm &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Representation of Cooperation in the Summi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cooperation' in the text of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Summit

This research is to extract the texts revealed in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Summit and analyze the meaning of 'cooperation' of them. To accomplish this, we conceptualized 17 related documents into 310 codes and categorized them into three items: perception in reality,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and categorized them into values, tasks, areas, institutions, attitudes, and evaluations. And it came to the conclusion considering of word frequency and context and structurally explaining such as: First, the trilateral leaders defined the scope of cooperation very broadly and had optimistic assessments and values. In addition, they showed a respectful attitude towards the surrounding areas. Second, the issues of cooperation has been more and more moved to the public interests while the discussion on security was relatively not on the table. Emerging security issues have been reprocessed into alternative words -natural disasters, energy, etc.- but words related to traditional security -disarmament, nuclear, and weapon- appeared very few. It also does neither mention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 North Korea issues.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security and North Korea issue are sensitive issues among three countries, but also are not easy topics to approach as a common concern at the Summit. Although this research is limited only to concentrate on the given documents, it can give meaning to have reviewed the Trilateral Summit on the basis of texts, and deduced representation of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leaders. Finally, this research is meaningful not only in terms of how the three countries recognize the intentions and limitations of cooperation, but also in terms of providing a systematic and objective follow-up study centering on texts.

Key words: Trilateral Summit, Cooperation, Text,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부 록]

1. 부호화 노드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공무원들간의)교류와 협력의 강화	1	1
10+3틀에서의 협력	1	2
10가지 우선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	1	1
2011년 한국에 삼국협력사무국을 설치	1	1
2012기후변화 협정 이후의 협력	1	1
2020년까지 협력을 통하여 특정한 목표와 비전을 성취	1	1
APEC, IPEEC 등 기존에 있는 장관급 수준의 프레임워크에서의 협력	1	1
COP16, CMP6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대하기 위한 삼국의 협력	1	1
개발협력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존중	1	1
건전한 협력	1	1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심화	1	1
경제, 무역, 정보, 환경보호, 인력자원 개발과 문화와 같은 우선 순위에서의 효율적인 협력	1	1
경제와 무역에서의 협력	2	2
경제적 협력	2	3
경제협력을 촉진	1	1
고위급 협력을 가져 올것	2	2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1	1
공해방지 및 조절, 위험 폐기물 관리 기술, 전자제품 폐기물 관리 기술, 농작물 연구에 관한 교류와 협력	1	1
과학과 혁신에서의 삼국협력	2	2
과학기술에서의 교류와 협력	1	1
과학기술에서의 협력	2	3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현재의 삼국간 메커니즘	1	1
관광에서의 협력	1	1
관세에서의 협력	2	3
교육에서의 삼국간 협력	3	3
교차과 협력	2	5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협력	1	1
국제금융제도에서 협력과 조화를 강화	1	1
국제문제에서 협력을 강화	1	1
국제커뮤니티와의 협력	1	1
국제협력	1	1
군대 교류와 협력	3	3
군축에 관한 관점 교류와 협력	1	1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UN등과의 국제적 협력	1	1
금융분야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 아시안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	1	1
금융협력	2	3
기준의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의 틀안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미세먼지와 모래, 산성강하물, 전자 폐기물 등의 불법적인 타국가 폐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1	1
기후변화에 관한 post_2012국제 협력	1	1
녹색성장 및 저탄소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삼국간 협력	1	1

● 농업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식량 및 농업관련 이슈에서의 협력	1	1
● 농업에서 삼국간 협력의 메카니즘	1	1
● 농업협력	2	4
● 다가오는 새해에 삼국의 협력을 증진	1	1
● 다른 지역의 프레임워크와 협력	1	1
● 다른국가들과의 협력	1	1
●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한 조건에 만족	1	1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2	2
● 대학간 교류와 협력	1	1
● 대화와 협력	2	4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삼국의 협력	1	1
● 더 나은 보건협력	1	1
●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지지	1	1
● 도하 라운드를 넘어 다자적 무역 체계의 종진을 위한 삼국간 협력	1	1
● 동북아시아 표준협력 포럼	2	2
● 동아시아 협력	2	2
● 동아시아 협력에서 아세안의 선도적 역할을 지지	1	1
● 동아시아 협력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존중	1	1
● 동아시아 협력의 종진	1	1
● 동아시아 협력의 추동력으로서의 아세안	1	1
●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1	3
●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 따오기 등의 텃새류와 철새의 보존을 위한 협력과 기술교환	1	1
●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해 삼국간의 협력 강화	1	1
● 모두가 승리하는 협력	1	1
●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1	1
● 무역과 투자에서 협력	2	3
● 문화교류와 협력	2	2
● 문화부 장관급의 협력	1	1
●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1	1
● 문화콘텐츠 미즈니스에서의 교관과 협력	1	1
● 미래의 삼국협력	1	1
● 미래지향적인 협력	2	2
● 미세먼지와 모래폭풍 등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3	3
●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한 협력	1	1
● 밀접한 삼국협력	1	1
● 밀접한 협력에 대한 기대	1	1
● 밀접한 협력의 지속	1	1

●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밀접한 협력을 강화	1	1
●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하여	1	1
● 북구작업을 위해 삼국의 협력을 강화	1	1
● 비지니스, 무역, 금융, 투자, 물류, 지적 재산권, 관세, 정보, 과학, 기술, 에너지, 환경보호, 재활용 경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	1	1
● 사막화 조절을 위한 교류와 협력	1	1
● 사회문화적 협력의 강화	1	1
● 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관광, 지적 재산권에서의 정책 협력	1	1
● 삼국협력	2	2
● 삼국협력은 UN헌장 뿐 아니라 다른 보편적 국제규범을 인지	1	1
● 삼국협력은 양자 간의 안정적인 발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	1	1
● 삼국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삼국의 정부	1	1
● 삼국 공동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 경제 협력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쇠	1	1
● 삼국간 경찰협력	1	1
● 삼국간 금융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 친선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강화	1	1
● 삼국간 협력의 계속적인 발전	1	1
● 삼국간 협력의 진전	2	2
● 삼국간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 역할을 강조	1	1
● 삼국간 확장된 협력	1	1
● 삼국간의 교육 협력	1	1
● 삼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	1	1
●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중요	1	1
●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제도구축을 강화하는 협력	1	1
● 삼국간의 협력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	1	1
● 삼국의 협력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탄력을 증가시키는 계기	1	1
● 삼국의 협력은 일본(대지진 피해)의 조기 복구에 기여할 것	1	1
● 삼국의 협력이 양면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	1	1
● 삼국의 협력이 정치적 신뢰, 무역,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그리고 금융협력을 강화	1	1
● 삼국협력사무국	3	4
● 삼국협력에 의해 늘어난 이익	1	1
● 삼국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와	1	1
● 삼국협력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1	1
● 삼국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	1	1
● 삼국협력은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	1	1
● 삼국협력은 투명하고, 열려있으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수행	1	1
● 삼국협력을 보다 통성하게 하고	1	1
● 삼국협력을 보장	1	1
● 삼국협력을 증진	1	1

●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밀접한 협력을 강화	1	1
●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하여	1	1
● 북구작업을 위해 삼국의 협력을 강화	1	1
● 비즈니스, 무역, 금융, 투자, 물류, 지적 재산권, 관세, 정보, 과학, 기술, 에너지, 환경보호, 재활용 경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	1	1
● 사막화 조절을 위한 교류와 협력	1	1
● 사회문화적 협력의 강화	1	1
● 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관광, 지적 재산권에서의 정책 협력	1	1
● 삼국협력	2	2
● 삼국협력은 UN헌장 뿐 아니라 다른 보편적 국제규범을 인지	1	1
● 삼국협력은 양자 간의 안정적인 발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	1	1
● 삼국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삼국의 정부	1	1
● 삼국 농업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 경제 협력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쇠	1	1
● 삼국간 경찰협력	1	1
● 삼국간 금융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 친선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강화	1	1
● 삼국간 협력의 계속적인 발전	1	1
● 삼국간 협력의 진전	2	2
● 삼국간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 역할을 강조	1	1
● 삼국간 확장된 협력	1	1
● 삼국간의 교육 협력	1	1
● 삼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	1	1
●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중요	1	1
●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제도구축을 강화하는 협력	1	1
● 삼국간의 협력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	1	1
● 삼국의 협력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탄력을 증가시키는 계기	1	1
● 삼국의 협력은 일본(대지진 피해)의 조기 복구에 기여할 것	1	1
● 삼국의 협력이 양면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	1	1
● 삼국의 협력이 정치적 신뢰, 무역,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그리고 금융협력을 강화	1	1
● 삼국협력사무국	3	4
● 삼국협력에 의해 늘어난 이익	1	1
● 삼국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와	1	1
● 삼국협력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1	1
● 삼국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	1	1
● 삼국협력은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	1	1
● 삼국협력은 투명하고, 열려있으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수행	1	1
● 삼국협력을 보다 통성하게 하고	1	1
● 삼국협력을 보장	1	1
● 삼국협력을 증진	1	1

● 삼국협력의 강화	2	2
● 삼국협력의 시작	2	2
● 삼국협력의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의 이익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존중 위에	1	1
● 삼국협력의 증진	2	3
● 삼국협력의 증진과 강화	1	1
● 삼국협력의 진행과정을 검토	1	1
● 삼림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강화된 협력	1	1
● 상호 이익과 모두의 승리를 위한 정신에 입각한 협력	1	1
●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2	2
●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	1	1
● 상호존중의 정신에서의 삼국협력	1	1
●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	1	1
●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1	1
● 성평등을 위한 삼국간 협력의 증진	1	1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맞선 삼국간의 협력	1	1
●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안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국의 협력을 강화	1	1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UNESCO틀안에서의 협력	1	1
● 소통과 협력	1	1
● 수사와 협조를 통한 협력의 강화를 위해 삼국간의 협력이 필요	1	1
●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삼국의 협력	1	1
● 스포츠 단체간 교류와 협력	1	1
● 스포츠에서의 협력	1	1
● 식량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1	1
● 신세기의 삼각협력	1	1
●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틀	1	1
● 심화된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대화	1	1
● 아세안+3, APEC, FAO, G20 등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 아세안+3, EAS, ARF, APEC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며	1	1
● 아세안+3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	1	1
● 아세안+3를 통한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1	1
●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1	1
●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	1	1
● 아세안은 지역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	1	1
● 아시아에서 지역협력	1	1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4	4
● 앞서 언급한 협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1	1
● 양자간 발전과 삼각협력	1	1
● 여업자원의 보호에서의 협력	1	1
●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	1	1

○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1	1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서의 협력	1	1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1	1
○ 지속가능한 삼림의 관리, 사막화 예방,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한중일의 협력 강화	1	2
○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삼국간의 협력 증진	1	1
○ 지속가능한 숲 관리 정책에 관한 깊이있으면서 다방면의 협력	1	1
○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한 협력의 심화	1	1
○ 지속가능한 숲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력	1	1
○ 지역 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의 강화	1	1
○ 지역 및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1	1
○ 지역 및 지역 하부단위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 지역과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1	1
○ 지역단위체들과의 협력 강화	1	1
○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1	1
○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강화	1	1
○ 지역의 상기와 통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의 강화	1	1
○ 지역협력	2	2
○ 지역협력을 증진	1	1
○ 지역협력의 증진	1	1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협력	1	1
○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삼국의 협력	1	1
○ 취약계층의 완전한 권리 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의 협력	1	1
○ 천선을 공공히 하는 삼국의 협력	1	1
○ 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해 밀접한 협력의 지속	1	1
○ 포괄적인 협력	3	4
○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	1	1
○ 표준에 관한 삼국협력의 강화	1	1
○ 표준에 관한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1	1
○ 표준에 관한 협력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핵심 도구	2	2
○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	1	1
○ 표준에 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방법에 대한 세심한 토론이 필요	1	1
○ 표준에 대한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수	1	1
○ 하부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을 지지	1	1
○ 학생 및 교사의 교환 등을 통한 협력	1	1
○ 한중일의 협력은 많은 기회를 줄것	1	1
○ 해양 안전과 탐색에 관한 삼국 협력	2	2
○ 해적, 테러, 사이버, 전염성질병,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같은 비전통안보에서 협력의 진전	1	1
○ 행정,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협력	1	1
○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	1	1

○ 협력 메커니즘의 더 나은 이용	1	1
○ 협력을 강화	3	5
○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 조치	1	1
○ 협력을 위한 교류	1	1
○ 협력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	1	1
○ 협력을 증진시키기위하여 다음 영역에서의 해결책이 필요	1	1
○ 협력의 10가지 우선순위	1	1
○ 협력의 강화	4	5
○ 협력의 꾸준한 발전	1	1
○ 협력의 범위와 깊이	1	1
○ 협력의 분야를 넓히고	1	1
○ 협력의 수월	1	1
○ 협력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1	1
○ 협력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1	1
○ 협력활동을 모니터	1	1
○ 협의와 협력	1	1
○ 협의와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1	1
○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 강화	1	1
○ 환경보호에서의 협력	1	1
○ 효율적인 협력	2	3
○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의 설치	1	1

2. 범주화

1) 가치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가치	0	0	
● 건전한 협력	1	1	
● 교환과 협력	2	5	
● 모두가 승리하는 협력	1	1	
● 미래의 삼국협력	1	1	
●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하여	1	1	
● 삼각협력	2	2	
● 삼국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	1	1	
● 삼국협력은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	1	1	
● 상호 이익과 모두의 승리를 위한 정신에 입각한 협력	1	1	
●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2	2	
●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	1	1	
●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안 국가들의 노력을	1	1	
● 소통과 협력	1	1	
●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틀	1	1	
● 양자간 발전과 삼각협력	1	1	
● 전략적 관점에서의 삼국협력	1	1	
● 지역의 생기와 동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의 강화	1	1	
● 지역협력	2	2	
● 지역협력을 증진	1	1	
● 지역협력의 증진	1	1	
● 포괄적인 협력	3	4	
● 협의와 협력	1	1	
과제	0	0	
영역	0	0	
제도	0	0	
태도	0	0	
평가	0	0	

2) 과제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가치	0	0	
과제	0	0	
(공무원들간의)교류와 협력의 강화	1	1	
10+3틀에서의 협력	1	2	
10가지 우선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	1	1	
2011년 한국에 삼국협력사무국을 설치	1	1	
2012기후변화 협정 이후의 협력	1	1	
2020년까지 협력을 통하여 특정한 목표와 비전을 성취	1	1	
APEC, IPEEC 등 기존에 있는 장관급 수준의 프레임워크에서의 협력	1	1	
COP16, CMP6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하기 위한 삼국의 협력	1	1	
경제협력을 촉진	1	1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1	1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협력	1	1	
국제커뮤니티와의 협력	1	1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UN등과의 국제적 협력	1	1	
금융분야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 아시안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	1	1	
기존의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의 틀안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다가오는 새해에 삼국의 협력을 증진	1	1	
다른 지역의 프레임워크와 협력	1	1	
대화와 협력	2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삼국의 협력	1	1	
도하 라운드를 넘어 다자적 무역 체계의 증진을 위한 삼국간 협력	1	1	
동아시아 협력	2	2	
동아시아 협력의 증진	1	1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1	3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문화부 장관급의 협력	1	1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한 협력	1	1	
밀접한 협력의 지속	1	1	
삼국간 친선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강화	1	1	
삼국간 협력의 계속적인 발전	1	1	
삼국간 확장된 협력	1	1	
삼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	1	1	
삼국간의 협력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	1	1	
삼국협력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1	1	
삼국협력을 보장	1	1	
삼국협력을 증진	1	1	
삼국협력의 강화	2	2	
삼국협력의 시작	2	2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삼국협력을 증진	1	1
삼국협력의 강화	2	2
삼국협력의 시작	2	2
삼국협력의 증진	2	3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	1	1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1	1
신세기의 삼각협력	1	1
심화된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대화	1	1
아세안+3, APEC, FAO, G20 등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아세안+3, EAS, ARF, APEC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며	1	1
아세안+3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	1	1
아세안+3를 통한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1	1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1	1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	1	1
아시아에서 지역협력	1	1
연구자 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을 통한 협력의 증진	1	1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맞서 지역협력을 강화	1	1
재난을 당한 국가는 재난 구호팀에게 가능한 협력을 제공	1	1
저탄소기술의 확산을 통해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치	1	1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1	1
젊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삼국의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의 개	1	1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밀접한 협력	1	1
정책과 프로그램의 촉진을 통한 협력	1	1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삼국협력을 증진	1	1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1	1
지역단위체들과의 협력 강화	1	1
취약계층의 완전한 권리 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의 협력	1	1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	1	1
표준에 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방법에 대한 세심한 토론이 필요	1	1
표준에 대한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수	1	1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	1	1
협력 메커니즘의 더 나은 이용	1	1
협력을 강화	3	5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 조치	1	1
협력을 위한 교류	1	1
협력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	1	1
협력을 증진시키기위하여 다음 영역에서의 해결책이 필요	1	1
협력의 10가지 우선순위	1	1
협력의 강화	4	5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협력의 분야를 넓히고	1	1
협력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1	1
협력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1	1
협약과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1	1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의 설치	1	1

3) 영역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C	
영역	0	0		2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심화	1	1		
경제, 무역, 정보, 환경보호, 인력자원 개발과 문화와 같은 우선 순위에서의 효율적인	1	1		
경제와 무역에서의 협력	2	2		
경제적 협력	2	3		
공해방지 및 조절, 위험 폐기물 관리 기술, 전자제품 폐기물 관리 기술, 농작물 연구에	1	1		
과학과 혁신에서의 삼국협력	2	2		
과학기술에서의 교류와 협력	1	1		
과학기술에서의 협력	2	3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현재의 삼국간 메카니즘	1	1		
관광에서의 협력	1	1		
관세에서의 협력	2	3		
교육에서의 삼국간 협력	3	3		
국제금융제도에서 협력과 조화를 강화	1	1		
국제문제에서 협력을 강화	1	1		
국제협력	1	1		
군대 교류와 협력	3	3		
군축에 관한 관점 교류와 협력	1	1		
금융협력	2	3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미세먼지와 모래, 산성강하물, 전자 폐기물 등의 불법적인 타국	1	1		
기후변화에 관한 post_2012국제 협력	1	1		
녹색성장 및 저탄소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삼국간 협력	1	1		
농업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식량 및 농업관련 이슈에서의 협력	1	1		
농업에서 삼국간 협력의 메카니즘	1	1		
농업협력	2	4		
대학간 교류와 협력	1	1		
더 나은 보건협력	1	1		
따오기 등의 텃새류와 철새의 보존을 위한 협력과 기술교환	1	1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해 삼국간의 협력 강화	1	1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1	1		
무역과 투자에서 협력	2	3		
문화교류와 협력	2	2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1	1		
문화콘텐츠 미즈니스에서의 교환과 협력	1	1		
미래지향적인 협력	2	2		
미세먼지와 모래폭풍 등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3	3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밀접한 협력을 강화	1	1		
북구작업을 위해 삼국의 협력을 강화	1	1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C
● 사막화 조절을 위한 교류와 협력	1	1	
● 사회문화적 협력의 강화	1	1	
● 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1	1	
● 삼국 농업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 경찰협력	1	1	
● 삼국간 금융협력의 강화	1	1	
● 삼국간의 교육 협력	1	1	
● 삼림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강화된 협력	1	1	
● 성평등을 위한 삼국간 협력의 증진	1	1	
●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한 UNESCO들만에서의 협력	1	1	
● 수사와 협조를 통한 협력의 강화를 위해 삼국간의 협력이 필요	1	1	
●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삼국의 협력	1	1	
● 스포츠 단체간 교류와 협력	1	1	
● 스포츠에서의 협력	1	1	
● 식량안보 이슈에서의 협력	1	1	
● 어업자원의 보호에서의 협력	1	1	
●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	1	1	
● 에너지 협력	1	1	
● 에너지에서의 협력	1	1	
● 운송협력	1	1	
●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	1	1	
●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의 강화	1	1	
● 위험폐기물에 대한 협력	1	1	
● 유전자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이익을 얻기 위한 협력	1	1	
● 유행병 통제와 보건연구에 관한 삼국간 교류와 협력	1	1	
● 자연재해 관리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삼국협력	1	1	
● 자연재해 관리를 위한 삼국 협력	1	1	
● 자연재해 예방과 관리에서의 협력	1	1	
● 재난관리, 보건, 관광, 인적자원, 교육 및 스포츠에서의 삼국 협력	1	1	
●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의 증진	1	1	
● 전염, 비전염성 질병, 식품안전, 시험약품에 대한 관리 및 에너지 대비 노력 그리고 보	1	1	
●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	1	1	
● 전염성 질병에 대응한 지역 협력의 강화	1	1	
● 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협력	1	1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ICT) 간의 협력	1	1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협력	1	1	
● 정보교류에서 협력을 강화	1	1	
●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협력의 심화	1	1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1	1	
지속가능한 삼림의 관리, 사막화 예방,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한중일의 협력 강화	1	2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삼국간의 협력 증진	1	1	
지속가능한 숲 관리 정책에 관한 깊이있으면서 다방면의 협력	1	1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한 협력의 심화	1	1	
지속가능한 숲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력	1	1	
지역 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의 강화	1	1	
지역 및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1	1	
지역 및 지역 하부단위에서의 협력을 강화	1	1	
지역과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1	1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1	1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강화	1	1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협력	1	1	
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삼국의 협력	1	1	
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해 밀접한 협력의 지속	1	1	
표준에 관한 삼국협력의 강화	1	1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	1	1	
학생 및 교사의 교환 등을 통한 협력	1	1	
해양 안전과 탐색에 관한 삼국 협력	2	2	
해적, 에너지, 사이버, 전염성질병,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같은 비전통안보에	1	1	
행정,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협력	1	1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 강화	1	1	
환경보호에서의 협력	1	1	

4) 제도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가치	0	0	
과제	0	0	
영역	0	0	
제도	0	0	
동북아시아 표준협력 포럼	2	2	
삼국협력사무국	3	4	
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APEC)	4	4	
제목	14	27	
태도	0	0	
평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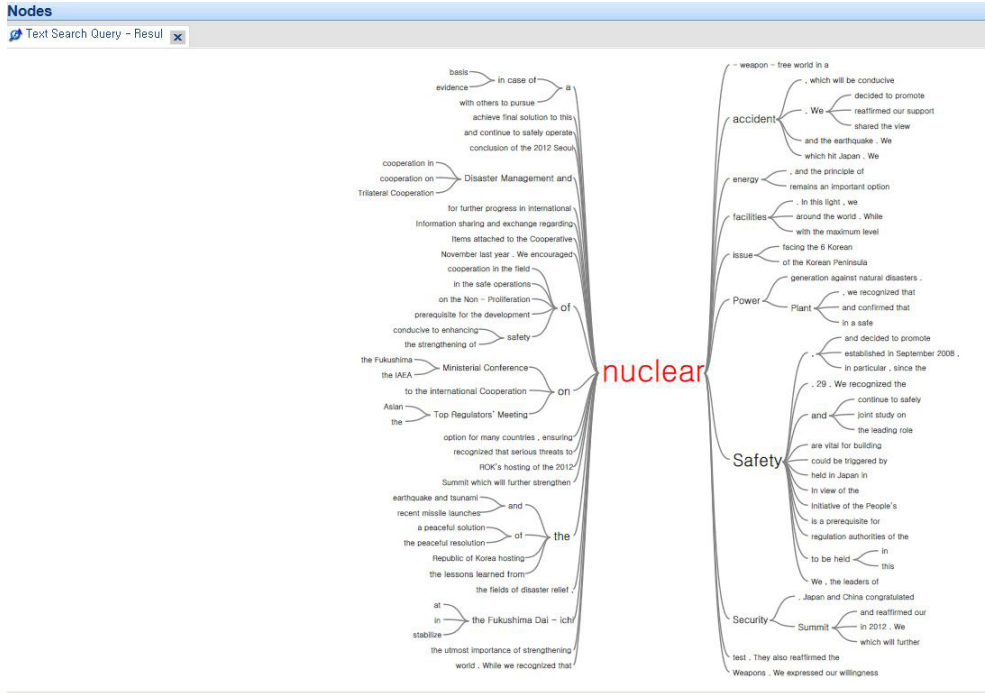
5) 태도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가치	0	0	
과제	0	0	
영역	0	0	
제도	0	0	
태도	0	0	
개발협력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존중	1	1	
다른국가들과의 협력	1	1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2	2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지지	1	1	
동아시아 협력에서 아세안의 선도적 역할을 지지	1	1	
동아시아 협력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존중	1	1	
동아시아 협력의 추동력으로서의 아세안	1	1	
밀접한 협력에 대한 기대	1	1	
삼각협력은 UN헌장 뿐 아니라 다른 보편적 국제규범을 인지	1	1	
삼각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삼국의 정부	1	1	
삼각협력은 투명하고, 열려있으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수행	1	1	
삼각협력의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의 이익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존중	1	1	
상호존중의 정신에서의 삼국협력	1	1	
아세안은 지역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	1	1	
앞서 언급한 협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1	1	
위자력 안전과 IAEA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지지	1	1	
이웃국가들과의 협력	1	1	
하부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을 지지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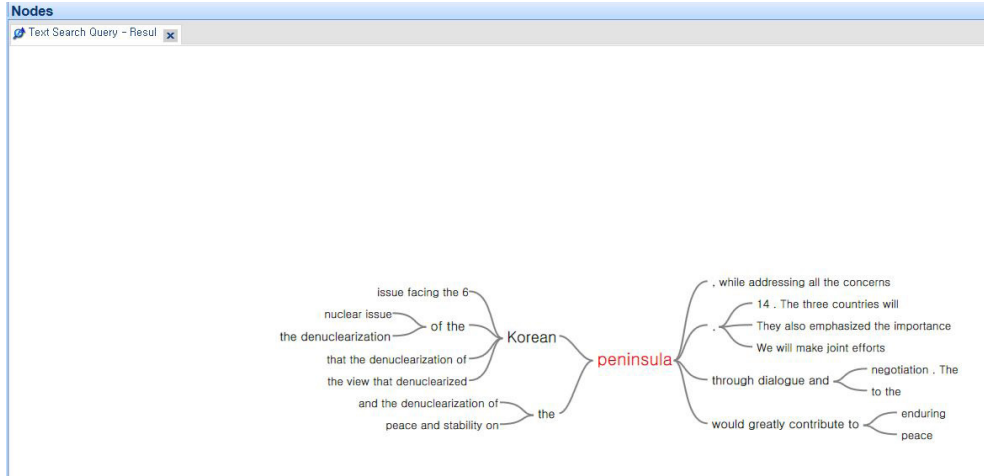
6) 평가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가치	0	0	
과제	0	0	
영역	0	0	
제도	0	0	
태도	0	0	
평가	0	0	
고위급 협력을 가져 올것	2	2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한 진전에 만족	1	1	
밀접한 삼국협력	1	1	
삼국협력은 양자 간의 안정적인 발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	1	1	
삼국간 경제 협력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열쇠	1	1	
삼국간 협력의 진전	2	2	
삼국간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 역할을 강조	1	1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중요	1	1	
삼국간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제도구축을 강화하는 협력	1	1	
삼국의 협력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탄력을 증가시키는 계기	1	1	
삼국의 협력은 일본(대지진 피해)의 조기 복구에 기여할 것	1	1	
삼국의 협력이 당면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	1	1	
삼국의 협력이 정치적 신뢰, 무역,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그리고 금융협력을 강화	1	1	
삼국협력에 의해 늘어난 이익	1	1	
삼국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와	1	1	
삼국협력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1	1	
삼국협력의 증진과 강화	1	1	
삼국협력의 진행과정을 검토	1	1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도전에 맞선 삼국간의 협력	1	1	
이분아(사막화)와 관련된 이전의 협력에 대해 만족	1	1	
이분아(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협력 증진은 국제공동체뿐 아니라 삼국의 이익에도 부	1	1	
지난 10년간의 협력	1	1	
친선을 공공히 하는 삼국의 협력	1	1	
표준에 관한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1	1	
표준에 관한 협력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핵심 도구	2	2	
한중일의 협력은 많은 기회를 줄것	1	1	
협력의 꾸준한 발전	1	1	
협력의 범위와 깊이	1	1	
협력의 수행	1	1	
협력활동을 모니터	1	1	
효율적인 협력	2	3	

2) nuclear



3) peninsula



4) security

